

社說

쥐꼬리 예산으로 물거품된 다형문학잔치

가을이면 못사람들의 기억 속에 떠오르는 시인이 있다. “가을에는 기도하게 하소서/낙엽들이 지는 때를 기다려 내게 주신/검역한 모국어로 나를 채우소서~”로 시작되는 ‘가을의 기도’라는 시를 남긴 다형 김현승시인(1913-1975)이다. 다형은 7세때 부친 김창국 목사를 따라 광주에 이주해 양림동에서 소년기를 거쳐 송일중학교 교사와 조선대 교수를 지내면서 주옥같은 현대시를 발표했다. 그의 대표시들은 양림동의 고유한 경험에서 영감을 얻은 작품이 많다. 무등산과 양림동 교회당 첩담, 플라타너스, 대술 위로 날아오르던 까마귀떼 등은 양림동의 생생한 풍경들이다. 다형은 특히 광주를 사랑했다. ‘산줄기에 올라-K도시에 바치는’에서는 자유를 위한 투쟁과 이웃에 대한 따뜻한 정감이 조화를 이루어 꽃처럼 피어나는 도시로 표현하고 있다. 다형은 조선대 교수 재직시절 문명란, 손광은, 문순태, 박흥원, 진현성 등 수많은 시인 제자들을 양성해 남도 현대문학의 계보를 만들었다. 또한 6·25동란중인 1953년 5월 동인지 ‘신문학’을 창간해 한국문학사의 단절을 막았을 뿐 아니라 한때 광주를 한국문학의 중심으로 우뚝 세웠다.

이처럼 다형은 한국시단에서 가장 뛰어난 지성 시인의 한 사람이자 광주가 낳은 불세출의 향토시인이다. 그럼에도 다형을 기억하고 기리는 기념사업은 해가 갈수록 희미해지고 있어 안타깝기 그지없다. 다형기념사업회는 그동안 광주시민들의 의식 속에 다형의 문학정신을 불어넣음으로써 예향인이라는 긍지와 자부심을 심어주기 위해 광주시 지원을 받아 전집발간, 학술세미나, 영상물 제작, 기념시비 건립 등 기념사업을 꾸준히 해왔다.

그런데 올해 갑자기 광주시 보조금이 예년의 1/10 수준으로 대폭 줄어들면서 관련 사업을 중단해야 할 지경에 처해있다. 기념사업회는 매년 2-3천 만원의 보조금을 지원받았으나 올해 사업예산은 비영리단체공모를 통해 확보한 300만원이 고작이다. 결국 기념사업회는 올해 계획했던 ‘다형문학잔치’를 포기하기로 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다른 문학행사에는 이보다 2배-7배 이상 지원해주면서 다형기념사업에는 쥐꼬리만한 보조금을 주는 것은 적절하지 못한 처사이다. 광주시의 전향적인 검토가 요구된다.

한전공대 설립마저 정쟁의 대상 삼아서야

지난 11일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한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자유한국당 등 야당 의원들은 한결같이 한전공대 설립 반대 목소리를 높였다.

자유한국당 김규환 의원은 “(자신의) 지역구인 대구 동구에 수소 산업단지가 있는데 수소 대학 만든다면 동의하겠느냐”며 국가 발전전략 차원에서 추진되는 한전공대 설립을 지역적인 문제로 해석하는 발언을 했다.

같은 당 윤환홍 의원 역시 “대전 카이스트, 광주 지스트, 울산 유니스트 등 특성화 대학이 없고 학생이 줄어 대학 갈 학생이 없는 상황인데도 돈을 들여 또 만들어야 하느냐”며 “국민이 내는 전기세에 포함된 전력 기금을 대학설립에 사용해서도 안 된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이종배 의원은 “졸속 한전공대라고 지칭하고 “2022년 개교 목표라는데 문재인 정부 임기 중에 하려고 전체가 거기에 맞춰서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현재 진행 상황으로는) 교사 준공 후에 인가 신청하게 돼 있는 교육법 위반 소지도 있다”며 “전력 기금을 쓸 수 있도록 한 전기사업법 시행령을 하반기에 개정하려는 이유도 주주 설득, 국민 공감 대 형성을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다만 전남 열린 전남도 국정감사에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안상수 의원은 “한전공대는 막대한 국민 세금으로 설립되는 데 최적의 활용방안을 고민해야 한다”면서 “개발이익으로 전체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안으로, 예를 들면 한전공대 설립부지 타운 자체에 대학을 몇 개 유치하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고 활용방안을 제안해 눈길을 끌었다.

한전공대 설립은 혁신도시 시종2의 장기비전으로서 문재인 정부 핵심 국정과제이다. 또한 세계 최고의 에너지 특화 대학을 세워 에너지 분야 우수인재 양성 및 에너지산업 클러스터 조성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국가의 백년대계를 짚어질 대한민국 신산업 핵심축이 될 한전공대 설립문제를 정쟁의 대상 삼아서야 한다면 국가의 미래는 어떻게 될지 걱정이다. 한전공대 설립 문제는 그동안 충분한 정치적 논란을 거쳐 확정된 국정과제인 만큼 문재인 대통령 임기내 개교 일정에 맞춰 순조롭게 추진되도록 하는 게 바람직한 태도이다.

표류하는 ‘군공항 이전’...행정과 정치의 경계

(국방부장관), 예비이전후보지 선정(국방부장관), 이전후보지 선정(이전부지선정위원회), 주민투표·유치신청(이전후보지 지자체장), 이전부지 선정(이전부지선정위원회)이다.

광주 군공항의 경우 두 번째 단계인 이전건의타당성 검토에서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고 있다. 유력 후보지역 중 한 곳인 무안군이 강력 반발하고 있는 게 가장 큰 이유로 꼽힌다.

광주와 함께 군공항 이전을 추진 중인 수원은 예비이전후보지 선정, 대구는 이전후보지 선정까지 진행된 상태다. 올해가 3개월도 채 안남았으니 광주는 지난 6년간 허송세월한 것과 다를 바 없다. 사실상 ‘멈춤’ 상태다.

이용섭·김영록 ‘진짜 정치’ 보여라

이용섭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지사는 2018년 8월 20일 민선 7기 첫 시·도 상생협의회에서 2021년까지 광주공항의 민간 기능을 무안공항으로 이전하는 것을 골자로 한 합의문을 발표했다. 광주 군공항 이전에 상호 협력기로 원칙적으로 합의하기도 했다.

이 합의를 놓고 양 시·도는 각각의 해석을 통해 접근하고 있다. 광주에서는 합의해놓고 왜 전남이 나서지 않느냐고 불만을 내놓는

지속가능한 주민자치! 공동체가 답이다

간 자신이 원하는 농작물을 경작할 수 있다. 3천개 이상의 가구 및 7천명 이상의 지역주민이 P-PATCH에 참여하고 있다. P-PATCH는 지역주민들이 자발적인 참여에 의해 관리·운영되며, 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위해 시·군·구·읍·면·동은 정기적인 P-PATCH 회의를 통해 일정부분 보조금을 지원한다. 31년 만에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을 앞두고 있는 우리는 상당부분의 권한이 지방분권이라는 명목하에 이양될 예정이다. 지역이 이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아무리 훌륭한 제도가 시행되더라도 제도정착은 쉽지 않을 것이다. 시·군의 P-PATCH 프로그램에 몇 가지 배울 점을 적어 보았다.

첫째는 시민의 자발성과 참여다. P-PATCH를 관리하는 단체는 지역의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결성된 단체에 의해 관리가 된다.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주민들의 의무는 1년에 반드시 8시간을 자원봉사를 해야 한다. 즉 자신의 경작지 외 공동경작지에서 자원봉사를 의무적으로 하는 것이다. 자원봉사는 자발성에 기초하고 있다. 그런데 그 자발성에 의무를 더한 것이다. 우리는 자원봉사가 자발적이어야 한다고 하지만 그 자발성이 의무적이지 않

편집국에서



김재성 지역특집부장

지방자치시대 민선 단체장은 참바쁘다. 행정 업무는 기본이다. 각종 행사에 참석하는 것도 당연지사. 어쩔 수 없는 ‘표’ 관리용 일까지 간혹 소화해야 한다. 특히 광역단체장은 습득할 틈 없는 일정의 연속이다. 과거 광주시장과 전남지사의 세부 일정표를 본 적이 있다. 개개인마다 다르긴 하지만 하루를 분 단위로 쪼개는 경우가 부지기수다. 초인적 일정을 감당하는 와중에 광역단체장의 가장 큰 임무는 결정의 순간, ‘적확한 판단’을 내려야 한다는 점이다. 대개 그 판단의 기저에는 행정의 원칙이 깔려 있다. 반면, 행정논리를 넘어 정치적으로 접근해야 할 때가 있다. 행정과 정치 영역의 경계가 사라져야 해결될 일들이 있다는 이야기다. 그래서 행정과 정치의 결합체인 민선 단체장은 참 쉽지 않은 ‘직업’일 수밖에 없다.

광주시장이 사라진 상무지구에는 군 전투기 소음 속에 산다. 상무지구 주민들 뿐만 아니라, 시청 공무원들도 사정은 마찬가지일 터. 설

자치칼럼



김용민 송원대학교 교수 광주전남지방자치회장

미국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시애틀은 마이크로소프트사, 스타벅스, 구글, 페이스북 본사가 있는 인구 약 70만명이 거주하고 있는 도시이다. 또한 다양한 인종과 문화가 공존하는 도시이기도 하다. 필자는 시애틀에서 방문할 기회가 있어 시애틀시 근린부서에서 진행되고 있는 많은 프로그램과 서비스를 접하게 되었다. 시애틀시 근린부서 프로그램 중 하나인 P-PATCH를 소개하고자 한다.

P-PATCH는 지역사회연계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은 개인과 단체에게 유기적 채소, 꽃, 과일 등을 경작할 수 있도록 도심 속에 시애틀 정부가 제공하는 도시농업 공간이다. 규모는 약 1천평~2천평 정도 되는 경작지를 90개 정도를 운영하고 있다. 농지를 이용하는 지역주민들은 연 40달러를 시정부에 비용을 지불하고 3평 남짓 땅을 분양받아 1년

독자투고

북한이탈여성, 사회적 약자 개념 접근 우리사회 관심 필요

북한 이탈 주민이 지속화되면서 우리 주변에서 흔히들 탈북민이라고 부르는 북한이탈주민을 접하기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닌 시대에 살고 있다. 하지만 자유에 대한 열망과 새로운 삶을 꿈꾸며 찾은 대한민국에서 태생부터 다른 그들이 정착하기란 녹록치 않은 것도 현실이다.

통계에 따르면 2019년 7월 기준 우리나라에 입국한 북한이탈주민은 3만1천457명으로, 이 중 여성이 약 74.8%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치만 보더라도 입국 북한이탈주민 중 여성들의 우리

사회 입국이 얼마정도인지 대략 이해가 될 것으로 본다. 그만큼 북한이탈주민의 경제상황이 어렵고 대한민국 사회로 살고자 하는 열망이 북한 여성들 위주로 많다는 것을 반증한다고 할 것이다. 하지만 다른 환경에서, 국내의 경제상황,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식 등 여러 여건들로 인해 이들이 안정적인 삶의 터전을 찾기란 쉬운 것이 아니어서 정착에 실패한 일부 북한이탈주민은 힘든 생활고에 몸도 마음도 지쳐있는 경우도 상당하다. 물론 탈북 이후 한나원에서 안정적인 사회생활 영위를 위한 각종 교육 등을 받고 있지만

실상 국내 교육 및 취업 경험이 없는 여성 북한이탈주민이 할 수 있는 직업의 선택폭도 좁고 급여 또한 생활에 풍족한 수준은 아니어서 각종 유혹에 노출되기 쉬운 구조이기도 하다. 물론 남한 정착 이후 꾸준한 자기관리와 노력으로 전문분야에서 자기의 역량을 발휘하여 안정적인 정착에 성공한 경우도 상당히 많으나 그나마 위안으로 삼아야 할 듯하다.

현재 경찰에서도 관내 북한이탈주민에 대해 신변보호 경찰관을 지정해 범죄예방 교육 및 상담 등 범죄에 노출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

고 지자체와 하나센터 등 관련 기관에서도 탈북민 지원에 남다른 관심을 가지고 접근하고 있다. 앞으로도 북한이탈주민들의 탈북 리스는 계속될 것이고 남성보다 여성 북한이탈주민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사회 각계에서도 입국 여성북한이탈주민이 취업 등 문제로 불안정한 정착상태를 해소하기 위해 배려가 필요하며, 여성 북한이탈주민 또한 당장의 생활고를 해결할 생각으로 유혹에 빠지기보다 주변 지자체 및 지역 하나센터 등 관련 기관의 도움을 요청하여 우리사회에서 하루빨리 안정적인 정착할 수 있도록 자기 노력 또한 필요하다 할 것이다. /김덕형·장성경철서 정보보안과

* 외부필자의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독자투고를 기다립니다. 하고싶은 이야기, 사진 등을 보내주세요.

그래픽 뉴스

사망 후 유족없어 국민연금 수급권 소멸 5년간 1만3천여명

국민연금은 국가가 시행하는 노후소득보장제도다. 경제활동 기간에 최소 가입 기간 10년(120개월) 이상 보험료를 내고 은퇴 후 수급연령이 되면 노령연금을, 가입 기간에 질병이나 부상으로 장애가 발생하면 장애연금을 받는다.

2019년 기준으로 최소 10년 이상 월 소득의 9%(직장인은 본인과 회사가 반반씩 부담)를 꼬박꼬박 보험료로 내야만 수급연령(60~65세)에 도달했을 때 노령연금으로 탈 수 있는 권리를 획득한다. 낸 보험료가 많고 가입기간이 길면 노후에 받는 노령연금은 많아진다. 하지만 수급연령이 돼서 노령연금을 받다가 사망했을 때는 ‘국민연금법에서 정한 유족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상황이 달라진다.

국민연금법상 유족은 일반적 개념의 유족과 다르다. 국민연금법에 따른 유족의 범위와 순위는 배우자, 자녀(만 25세 미만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 부모(만 61세 이상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 손자녀(만 19세 미만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 조부모(만 61세 이상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 등이다. 최우선 순위자는 배우자다. 국민연금법상의 유족이 있으면, 노령연금 수급자가 수급 중 숨지더라도 그 유족에게 유족연금이 지급되기에 문제가 없다.

하지만 국민연금법상의 유족이 없을 때 연금 수급자가 사망하면 수급권이 그냥 소멸한다. 특히 조기 사망해 낸 보험료보다 사망 전까지 받은 연금 액수가 훨씬 적은 경우 주변에선 손해를 본 듯한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다. /연합뉴스

광주매일신문 1991년 11월 1일 창간 http://www.kjdaily.com

회장 馬亨列 사장·발행·편집인 南成淑 주필 朴俊洙 편집국장 吳星洙

(우)161836 광주광역시 남구 천변로 338번길 16 대표전화 (062)650-2000 구독신청·배달안내 (062)650-2022

| | | | |
|--------------|-------------------|----------------|--------------|
| 편집부 650-2090 | 지역특집부 650-2060 | 광고문의 650-2099 | FAX |
| 정치부 650-2030 | 체육부 650-2065 | 광고국 650-2072 | 광고국 650-2016 |
| 경제부 650-2050 | 사진부 650-2080 | 경영지원국 650-2010 | 편집국 650-2017 |
| 사회부 650-2040 | 논설실 650-2006 | 기획사업국 650-2079 | 입무국 650-2019 |
| 문화부 650-2067 | 서울지사(02) 786-9488 | 업무국 650-2020 |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2002년 4월 30일 등록, 등록번호:광주가10(가)1 *구독료 월 10,000원 1부 500원